

COMMENT

(선행행정학 100% 적중)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8 지방9급 행정학개론은 최근 치러진 다른 행정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중상수준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는 5문항 정도에 불과했고 그동안 빈출되었던 A, B급 주제에 대한 출제비율이 65% 정도였는데 이처럼 기출문제와 A, B급주제의 출제비중이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대체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지방직9급 행정학개론은 각종 행정이론이나 제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한 신경향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암기나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약간 고전하였을 것이고 심화위주로 좀 깊이 있게 이해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충분히 고득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10의 Berman의 정책집행모형과 문20의 유연근무제의 경우 약간 생소했을 수가 있는데 이론을 정확히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찾는다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선행행정학 커리를 밟은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강의나 교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어서 무난히 고득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학시험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난이도를 대체로 중상정도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이도 조절의 방법으로 종합형문제, 숫자문제, 응용문제, 법령문제를 포함하여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는 경계문제(나올라 말락하는 언저리 부분), 즉 빈출범위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경계문제)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문9의 각종 평가제도, 문10의 Berman의 적응적 집행, 문15의 관청형성론, 문18의 김영란법 시행령 관련문제, 문19의 역량평가제, 문20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험에 임박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야겠지만 평소 심화이론이나 기출수업때는 그런 언저리(가장자리)내용을 다루어주는 완성도 높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9급시험이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수험생들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서울시 시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정진하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수험생이 있다면 남은 기간 지금이라도 빠르게 기본이론을 새롭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기필고)를 가지거나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대비 동형문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 김중규 -

0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해설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 성립기 때의 고전기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 또는 집행으로 인식하고 전략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한다.

- ☑ ② [X]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중시하며 정부개입에 의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 ③ [X]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와 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였지만 민주성은 저해할 소지가 크다.
- ④ [X]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하였다.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신공공관리론에 비교할 때 뉴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효율보다는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한 모형이다.

행정개념에 대한 학설

학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정책화기능설	신공공관리설	뉴거버넌스
행정본질	관리 · 집행	정책결정+집행	집행(사실)	목표 + 정책 + 집행	정책형성 + 집행	공공관리	Governance (협치)
관련학파	기술적 행정학	기능적 행정학	행정행태설	발전행정론	정책과학 등 신행정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 탈신공공관리
시기	1880~1930년대	1930~1940년대	1940~196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정치 · 행정	정치 · 행정 이원론	정치 · 행정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새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행정 · 경영	공 · 사행정 일원론	공 · 사행정 이원론	새 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이원론	행정의 시장화 (새이원론)	행정의 정치화 (새일원론)
이념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신뢰성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7

0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 ·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해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보다는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거시조직이론 체계

분석수준	결 정 론	임 의 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① 전략적 선택론 ②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① 조직군 생태론 ② 조직경제학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③ 제도화이론	공동체 생태론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408

0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④ 모든 인간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 ① [o] 비시장적인 영역(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방식을 적용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Mueller)이다.
- ② [o]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효율성과 함께 대응성(민주성) 구현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선택론을 정치적으로는 동의의 극대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 경제적으로는 비용의 극소화와 선호의 반영을 통한 효율성의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 ③ [o] 소비자의 선택과 선호를 무시하는 전통적 관료제를 잘못된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재 공급방식(다중공공관료제 등)의 도입을 강조한다.

공공선택론(PCM)의 문제의식

- 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
- ② 공공부문에서의 파레토 최적 실현
- ③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④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한계 - 계층제는 소비자(시민)의 선택을 억압하여 정부실패 초래
- ⑤ 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 경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 제고
- ⑥ 교환으로서의 정치 - 정치도 일종의 교환

공공선택론(PCM)의 기본가정과 특징

-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
- ②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③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개인의 이익 및 효용의 극대화
- ④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 ⑤ 연역적 이론 사용
- ⑥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⑦ 탈관료제적 처방 -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다중공공관료제)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147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③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 ② 계획예산제도
- ③ 영기준예산제도
- ④ 품목별예산제도

해설

- ③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합리주의(총체주의) 예산방식이다. PPBS의 하향식 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BO의 장점을 받아들인 결과 구성원의 참여와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적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기획과 예산 연계·단일화	①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② 합리적 의사결정 (완전한 합리모형)	② 우선순위 결정 곤란
③ 재정의 탄력성 확보 : 재정의 경직성 타파	③ 정치적·심리적 요인 불고려 : 관료들의 경험 무시
④ 예산운영의 다양성·신속성	④ 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 조직의 희생
⑤ 구성원 참여 확대 ← 상향적	⑤ 과도한 시간·노력과 정보량 요구
	⑥ 경직성 경비 축소 곤란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614

0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이다.

- ✓ ① [○] 거시적인 지출한도나 전략기획은 하향식으로 통제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자율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 ③ [○] 재정당국에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 자금관리 등 미시적인 부분은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한도 하달과 전략적 배분을 통해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636

0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경제적 측면에 입각하여 재정의 3대 기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 자원배분의 효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의 관료에 대한 통제는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① [○]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
- ② [○] 소득분배의 공평화 기능
- ③ [○] 거시경제의 안정화 기능

예상의 기능

법적기능	입법에 준하는 절차와 구속력		
정치적 기능	정치적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A.Wildavsky)		
행정적 기능	통제기능	1920년대 품목별예산	A.Schick
	관리기능	1950년대 성과주의예산	
	기획기능	1960년대 계획예산	Rabin & Lynch
	참여기능	1970년대초 목표관리예산	
	감축기능	1970년대후반 영기준예산	
경제적 기능	경제안정화	재정의 3대 기능 (Musgrave)	재정의 4대 기능
	자원배분(할당)의 효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		
	경제성장 촉진	Keynes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78

0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④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기관이다.

- ☑ ① [○] 법제처 등 4개 처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 ② [○]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17조).
- ③ [○] 소방청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이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395

08 월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② 월슨(J. Wilson)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여부에 따라 규제정치모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등 언론에 대한 규제는 월슨(Wilson)의 대중정치(다수정치)의 사례이다.

- ☑ ①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등 소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진입규제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객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 ③ [○] 낙태, 종교활동, 언론, 독과점, 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약한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 ④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환경오염규제, 각종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의 정치)의 사례이다.

월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 비용	집중	① 이익집단 정치	②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분산	③ 고객의 정치	④ 다수의 정치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7

0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해설

① ㄱ, ㄷ만 옳다.

- ☑ ㄱ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 ㄴ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 ㄷ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맞는 지문이다.
- ㄹ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에 의하여 2001.1부터 시행되어 온 평가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09.1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칭되었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7, 290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 ①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거시적) 집행과 적응적(미시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에 해당하는 적응적(미시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버먼(Berman)은 집행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산출하는 정책결과는 바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집행활동의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되는데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버먼(Berman)의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단계)

행정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채택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미시적 집행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
기술적 타당성	정책성고가 산출되기 위한 마지막 통로로써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

- ☑ ② [x]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 네 가지로 구성된다.
- ③ [x] 행정이 아니라 채택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 ④ [x] 채택이 아니라 미시적 집행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264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③

- ① 소방안전교부세
- ② 보통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③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다.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와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규정된 제도로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재원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증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조정제도

제도	근거법률	교부주체	교부대상	재원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모든 광역단체	시·군·구	징수 광역세의 3%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광역시·도	시·군	징수 광역세의 27%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보통세 수입액의 일부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797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중 하나이다.

해설

④ ④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과원 상태가 되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 ☑ ① [이]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직권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처분이다.

☞ 징계의 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직상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37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1항).

- ☑ ① [오] 「지방자치법」 제16조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 ② [오] 「지방자치법」 제16조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 ③ [오] 「지방자치법」 제16조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802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해설

②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ss)란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 · 정형화 · 루틴화 · 공식화하는 것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 ☑ ① [×] 표준운영절차가 만들어지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③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일률적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 반영을 곤란하게 한다.
- ④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의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 해당한다.

공식화의 장단점

장점	① 불확실성이나 혼란 행동의 변이성을 감소시켜 행동의 예측과 통제 ·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 루틴화된 규범에 의한 공정 · 공평한 과업 수행과 반응의 신뢰성 · 일관성 유지 가능 ② 구성원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통제가 용이하고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하며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효율적이고 정확 · 신속한 과업수행 가능 ③ 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 필요성 감소 ⇒ 간접적 감독으로의 전환 ④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 가능
단점	① 규칙에 의존함으로써 상하간의 민주적 · 인간적인 의존관계는 깨진다. ② 비개인화 · 비인간화 풍토가 확립되고 집권화를 초래한다. ③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는 창의성이나 탄력적 대응성이 저하된다. ④ 구성원의 자율과 재량이 제약되어 인간소외를 가져온다. ⑤ 문서주의나 번문욕례(red-tape), 동조과잉의 폐단이 발생한다.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355

15 더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해설

① P.Dunleavy(1991)는 Niskanen의 관료이익극대화설이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즉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가시적이고 책임이 수반되는 개선기능은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으므로 준정부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기고 자신들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선호한다.

- ☑ ② [×] 예산극대화동기보다는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 ③ [×] 중하위직 관료가 아니라 이전기관이다. 이전기관은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 관료는 기본적으로 공적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관청형성모형(P.Dunleavy)

예산의 유형	기관의 유형	예산극대화동기
핵심예산	전달기관 · 봉사기관	○
관청예산	이전기관	○
사업예산	통제기관	×
초사업예산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154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구분	종류	개념	피규제자의 자율성
규제방식	포지티브	원칙금지, 예외허용	낮음
	네거티브	원칙허용, 예외금지	높음
규제주체	직접규제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낮음
	간접규제	공동	높음
		자율	
규제대상	수단규제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낮음
	관리규제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중간
	성과규제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높음
규제시기	사전규제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낮음
	사후규제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높음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9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해설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에 해당한다.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 ② [○] 특정직
- ③ [○] 특정직
- ④ [○] 특정직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 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470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9.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5만원	10만원

해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7 개정)」에 따르면 음식물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출제자는 ③을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 ① [×] 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 ② [○]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종전에는 10만원 이하였으나 최근 개정법령에 따르면 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 ③ [×] 음식물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④ [○] 종래에는 모든 선물이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 김영란법 시행령(2018.1.17 개정) 상 금품수수 허용범위

	음식물비	선물(현금·유가증권 등 포함)	경조사비
2018.1 이전	원칙 3만원 예외 -	5만원 (금전은 제외, 유가증권은 포함)	10만원(화환포함) -
2018.1 이후	원칙 3만원 예외 -	5만원 (금전 및 유가증권 제외) 농축수산물은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53, 동형모의고사(올패스)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③

- ㉡.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neg$, $\perp$
② $\neg$, $\geq$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geq$

해설

③ L, D만 옳다.

- ☒ ㉠ [x] 역량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 [o] 역량평가는 다수의 역량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 ㉢ [o]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위공무원단인사규칙).
- ㉣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대상(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역량	내용
문제인식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적시에 감지·확인하고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분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규명
전략적 사고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방안을 확정
성과지향	주어진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
변화관리	환경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 및 조직이 변화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및 대응하도록 조치
고객만족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
조정·통합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519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 ④ 재택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나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초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실적분(근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	가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및 결제
	스마트워크형	주거지 근처 원격근무사무실(smart office)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사무처리
탄력근무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압축근무제		주 40시간 근무를 주 3~4일로 압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시간선택근무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주 20±5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정규직 공무원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717